

I. 개인적 배상.

일본 - 개인은 국제법의 주체가 아니다라는 주장.

「1911년 케이고협약」 제 4항, 「1919년 파리평화회의 (베르사이유조약)」,

「동양전쟁배상판결판정」, 그리고 국제관습법에 따라 국제 의무를 위반한

국가에 국가는 책임을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, 그 위반에 대해서 배상을
받을 권리가 있다.

2. 배상을 위한 민사보상.

시민에게 자판 결정 불복 : 일본정부에게 책임을 추궁.

한국의 위안부 강제에 관한 고소판결 판결에 따른 명령.

※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한·일 협정이 '위안부' 문제 청산 문제를 말하는
합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.

IV. 권고사항.

1. 형사소추를 위한 메커니즘의 필요성.

UN 인권 고등 판문점 선언 일본과 그 외 다른 국가에서 일본군의 잔학행위를
기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① 증거를 수집. ② 희생자를 면담. ③ 일본기업들에게 책임을 속한
사건에 관한 피해 보상 자료 제공.

④ 전쟁사 학살해석서 채택. 기록.

⑤ 형사소추를 가능케 하는 법률 제정 지원.

2. 법적 배상을 위한 메커니즘의 필요성

'아사아 여배 기증' 항명하사 일본 정부가 공식적인 법적 배상을 해야 하는
책임을 대변할 수 있다.

첨부 - 제 2차 세계대전 중 설치된 "위안소"에 대한 일본정부의

책임. 법적 책임에 관한 문제.

- 상대총며; 거기.

I. 일본은 위안소 설치와 운영, 정습에 있어 일본정부가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 (1993년), 사과발언 (제 2차 세계대전 종전 50주년, 1995년) 을 했으나 일본군에,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정해왔다.

<구거>

1. 최국의 국제법 분야에서 발간되거나 진보된 내용은 소급해서 적용되지 못한다.
2. 노예제에 관한 범죄는 "위안소" 를 통해 설립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정확히 일차되지 않는다. 노예제에 대한 금지는 2차대전 당시 국제법 분야에 관한 규범은 적용되지 않았다.
3. 2차 대전 당시에는 1901년 헤이그협약, 제 42에 포함된 규정들이나 국제법의 관습규범이 옥상동들 중의 강간 행위를 유죄하게 금지하지 않았다.
4. 전쟁법은 오직 교전당사국에 대한 일본군이 행한 행위에만 적용된다. 2차 대전 당시 한국은 일본과 합법화했다. 그러므로 적용될 수 X.

II. 국제관습법.

1. 노예제라 노예교역 / 2. 전쟁범죄로서의 강간 / 3. 비인도적 범죄.

4.

III. 배상.

국제관습법에 따르면 개별범죄자의 책임 뿐만 아니라 "사실적 책임"에 따라 일본 정부와 그 관료들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.